「3생(三生)정치」를 위하여

박호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장)

우리 사회에는 '이웃사촌' 과 '쌍놈' 이 더불어 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 모순의 하나는 인간적인 정으로 진하게 어우러진 공동체의식과 '아랫것' 에 대한 비인간적인 손가락질로 잘 길들여진 위계질서가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위계질서는 국가의 관료제도뿐만 아니라, 기업, 교육기관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속속들이 그 뿌리를 드리우고 있다. 이 강인한 위계질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끊임없이 재생산해내고 공동체적 단합을 뿌리째 뒤흔들어놓는 병원체로 기능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울타리 정치론' 이 지배한다.

말하자면 '울타리' 밖에서는 민주주의가 거들먹거려지지만, 울타리 안에서는 비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성행하고 있다는 말이다. 울타리 안팎이 겉과 속이 다르다. 예컨대 대학생, 노동자, 사무직원, 공무원 등 주요 사회조직 및 단체 구성원들은 자신의 조직 울타리 '밖' 에서는 '심지어' 대통령까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한다. 그러나 그 울타리 '안' 에서는 자신의 일상적인 운명조차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대학생은 대학생으로서,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사무직원은 사무직원으로서, 당원은 당원으로서, 시민은 시민으로서, 각자가 몸담고 있는 학원, 공장, 기업체, 단체나 기관, 지역 등지에서 사소한 생활주변의 문제로부터 크게는 그 조직의 진로, 조건, 운영, 장(長)의 선출 등에 이르기까지를 더불어 결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동참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자신들의 모든 민주적 통제권과 의사결정권을 꾸준히 넓혀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시민참여와 국민복지 확대로 민족통일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21세기의 역사적 과제인 것이다.

나는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른바 '3생정치' 의 확립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것은 '생산의 정치', '생명의 행정',

그리고 '생활의 자치'를 일컫는다.

우선 '생산의 정치'란 요컨대 한국인의 부정적 결함이라 지적받아오기도한 우리의 민족적 특성들을 긍정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변증법적인 발전을 쟁취해내는 정치를 의미한다.

흔히 한국 민족의 특수성으로, 1. 높은 교육열과 그에서 비롯하는 고급지식인의 풍부함, 2. 통일된 언어를 소유한 단일민족의 결속력, 3.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고도의 신앙심, 4. 주위열강의 끝없는 침탈 탓으로 닦여진 불굴의 항거정신 등을 꼽는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이러한 특성을 첫째, 이기적 생존경쟁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적 공동노력으로, 둘째,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내는 민족적 결집력으로, 셋째, 추상적인 관념을 위한 순교가 아니라 현실 사회의 구체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헌신적 결의로, 넷째, 끈기있게 난관을 돌파하는 불굴의 저항정신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 다음 '생명의 행정'이란 환경친화적 정책을 추구하는 관료사회의 의지를 일컫는다.

인간이란 어차피 자연에서 와서 더불어 자연으로 되돌아갈 피붙이 공동운명체 아닌가. 부귀한 사람이나 빈천한 사람도 언젠가는 모두 자연으로 돌아간다. 흙이 되기는 매일반일 터인데도 조그만 눈앞의 이익을 탐해 허망한 싸움을 그칠 줄 모르는 국민들을 깨우치고 이끌어가는 행정적 계몽주의 정신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자연을 죽이면 자연이 죽인다. 어리석은 자는 자연을 섬기고, 경박한 자는 자연을 파괴하며, 지혜로운 자는 자연에서 배운다. 국민을 자연 친화적 정책을 통해 힘을 사랑하는 인간이 아니라 사랑의 힘을 가진 인간으로 키워나가는 관료적 노력이 바로 '생명의 행정'인 것이다.

'생활의 자치'란 시민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끼치는 업무들을 시민이 직접 결정하고 관리하는 민주질서로 만들어나가는 정치행태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이러한 '3생정치'가 21세기 한국의 역사적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